

AI영재고 개교 삐걱... 광주·기재부, 운영비 30% 놓고 갈등

기재부 "광주에 있어 운영비 일부 부담 요구" 광주시 "정부 100%지원 타지역 영재고 차별" 과기부 "건물임대해 개교하는 방안까지 고려"

광주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구축의 핵심 중 하나인 AI영재고 설립을 놓고 정부가 광주시에 운영비 일부 부담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중단돼 2027년 3월 개교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광주AI영재고를 설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재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건축에 필요한 총사업비 665억원만 협의됐을 뿐 개교 이후 운영비 등에서 입장차이를 보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는 AI영재고 운영비는 개교 첫 해 100억원, 2년차부터는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최소 2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재부에 전액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부산에 설치될 한국과학영재고(300여명)의 운영비 200억원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AI영재고가 광주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운영비의 30%를 부담할 것을 강요하며 건축에 필요한 예산조

차 확정하지 않아 현재 설립 사업마저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는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적정성 조사까지 통과해 본격 착공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운영비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2027년 3월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광주지역 건물을 임대해 2027년 3월에 맞춰 개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AI영재고는 북구 오희동 일원에 부지면적 2만3138㎡,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설립된다. 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로 운영해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갖춘 뒤 내년부터 인재 모집에 나설 계획이었다.

AI영재고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대학원·인공지능 사관학교로 연결되는 인재 양성 사다리와 선도도시 구축의 핵심사업이다.

광주의 인재가 지역에 남아 관련 지식



광주시영재고등학교 조감도. 사진=광주시청 제공

을 펼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이지만 사업이 착공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AI영재고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라며 "AI영재고 주변으로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창업시설, 지식산업센터,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모여 있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는데 타지역과 다르게 광주에만 운영비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로 포함돼 기대를 모았던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도 최근 전남으로 유치 후보지가 결정되면서 인공지능 선도도시 구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오권철 기자

시민재단,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불발에 "국가적 낭비" "정부, 정치적 안배·행정 편의의 떠나 현명 결정을"

광주시민단체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불발에 대해 "관련 인프라를 모두 갖춘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 (센터) 두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전략적 후퇴"라고 주장했다.

광주NGO시민재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조건과 파급효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광주는 이미 국가 수준의 AI 생태계와 인프라를 집적해 왔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단순히 거대한 서버실을 세우는 사업이 아니라 데이터·인재·연구·기업이 한데 모여 초고성능 컴퓨팅을 실현 과제와 연결하는 것"이라며 "광주는 이런 집적의 경계를 실현할 최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 "광주는 이미 국가 AI컴퓨팅센터가 들어설 약 5만㎡ 부지와 120MW 수준의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효율성과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며 "바로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시를 외면하고 새 부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선택은 공적자금의 중복·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또 "대통령 공약으로도 명시된 바

있는 '광주 중심의 AI 생태계 완성'은 지역 안배 이상의 국가적 전략"이라며 "단기적 지역 표나 정치적 고려로 핵심 인프라를 분산시키는 정책은 오히려 장기적 불균형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국가적 인프라의 입지 결정에는 용수·전력·부지 비용뿐 아니라 생태계 시너지, 인력 집적성, 이동 속도와 운영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 간 갈등을 차단하고,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한 평가를 통해 결정을 정당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리면서 "광주에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세워지는 것은 지역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 21일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KT,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근 기자

"재정 한계 봉착" 전남대병원 경영지표 이례적 공개, 지원 호소

보도자료까지 내 "의정갈등 누적 적자 1500억 달할 듯"

호남권 거점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이례적으로 경영 지표를 직접 공개하며 심각한 재정 고갈 위기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전남대병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의정갈등 이후 누적 적자는 1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당기 손실은 2023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88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 "현금 유동성 악화로 460억원을 추가 차입, 부채비율은 400%를 넘어 의정갈등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특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직원 통상임금이 약 30% 인상으로 인건비도 100억여 원 더 지출해야 하고 500억원 규모의 추가 통상임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병원 재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분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만 연 170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 누적 적자가 1200억원에 이른다고도 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비상 의료 기간 동안 당기순손실, 누적 적자액, 부채비율 등 구체적인 경영 지표를 공개

하지는 않았다. 재정 악화 우려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를 들어 세부 내역 공개는 꺼렸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전남대병원 경영·재정 지표가 간접적으로 파악되긴 했지만, 병원이 직접 보도자료까지 내 재정 위기 현실을 공론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병원 재정이 한계에 다다르며 국고 지원 'SOS'가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들어 병원 직원들에게도 경영 상황을 소개하는 자체 소식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전남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병원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병원의 재정 위기였다.

국·시비 분담 사업에서 지방비 확보에 실패해 전남대병원의 복귀 지원 사업에 산이 '반토막' 난 데 따른 지적이 나왔고, 경영 정상화 방안 수립, 국고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정신 전남대병원장도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의료가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수개월에서 3년이 더 걸린다. 자구책은 마련하고 있지만 국립대병원 경영 상태, 수익 구조가 좋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급여를 포함한 필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실제 전공의들이 돌아왔다고 해도 병원이 정상화를 되찾으려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만큼 후유증이 큰 상황에서 재정 여력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이야기했다.

/전민규 기자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전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00m내 접근금지' 전처 찾아가고 연락... 전직 경찰 집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혼한 아내 B씨가 머물며 운영하는 펜션 주택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범법

으로부터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가정법원이 '전기통신 매체 이용 접근금지' 명령을 연장했는데도 B씨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A씨는 B씨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보호명령을 두차례 위반했다"며 "다만 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

중복·우회 정비, 난폭운전 개선... 광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광주시가 시내버스 '중복·우회 노선 정비' '난폭운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음에 따라 개편을 추진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4일부터 24일까지 시 누리집과 구청·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이렇게 바꿔주세요'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총 342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시민들은 중복되거나 우회가 심한 노선의 정비(592건)가 필요하다고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노선의 단순화·직선화를 통해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주요 지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간선형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효천·선운지구 등 지하철 미개통 지역과 시외곽지역을 중심생활권과 연결하는 신규노선 신설 요구도 다수 제기됐다.

운영시간과 관련해서는 배차간격(347

건, 증차(68건), 방학감차(46건), 시간표 준수(38건) 등이 많았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증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내버스 개선에 대해서는 난폭운전, 불친절 등 운전원 친절도 개선(352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정류소 및 차량 시설 보강(234건), 환승시간 연장(24건), 버스정보시스템(BIS) 정확도 향상(18건) 등의 순이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노선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4-6월 시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노선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배상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